

서구 J아파트 테니스장 놓고 입주민 갈등 '심각'

주민 과반 테니스장 용도 변경 찬성 클럽 '현행 법상 불가...나갈 수 없다' 고소전 비화... 말리던 경비원 해고

1천600세대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금호동 J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 존폐를 놓고 주민간에 분란에 휩싸였다.

일부 주민들이 테니스장 폐쇄를 요구하는 등 양쪽의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서 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이 해고되는 등 사건이 '주민의 갑질'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12일 광주 서구 금호동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테니스클럽(이하 클럽) 회장과 회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입대위는 지난 해 회의에서 테니스장을 다용도 운동시설로 바꾸자는 데 1천52명이 투표해 입주민의 절반이 넘는 814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클럽 측이 테니스장 관리권을 돌려주지 않자 입대위가 고소한 것이다.

이 아파트에 조성된 테니스장은 아파트가 건립된 2002년부터 30~40여명의 회원들의 회비

로 운영돼 오고 있다.

그러나 저녁시간에 테니스를 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테니스장 철거를 공약으로 내 건 A씨가 입주자 대표가 당선되면서 철거가 가시화됐다.

A씨는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장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원도 20여년간 30~50명 정도에 머물렀는데 다 회원 중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도 포함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테니스장 인근에서 흡연과 음주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들도 테니스장을 없애고 있는 추세도 반영했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십명의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테니스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테니스클럽 측은 이같은 입대위의 조치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철거 불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996년 이전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만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만큼 1997년에 허가된 J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클럽 측은 '현행 법이 변경되면 그때는 나가겠



광주 서구 금호동 J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 존폐를 두고 고소하는 등 심각한 갈등에 휩싸였다.

지만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른 아파트로 이사간 사람들이 옛 정을 잊지 못해 공을 치러 오는 것을 외부인이라고 막는 것은 지나치다. 오후 8시 이후로는 테니스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물리적 충돌을 말리던 경비원이 '엉뚱하게' 해고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달 9일 오후 9시에 취한 상태에서 테니스장을 찾은 이 아파트 감사 B씨가 '8시까지만 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회원들에게 항의하자 경비원이 제지했다.

B씨는 다른 클럽 회원들과 경비원에 의해 테니스장 밖으로 밀려났고 이에 B씨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항의했으며 이 경비원은 해고됐다.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내에서의 의결 결과는 자기 규약상 효력이 있다"며 "결정된 사안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의 행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간의 갈등이 엉뚱하게 경비원 해고로 번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셈이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들간의 갈등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충식기자 zorba85@srb.co.kr

오늘 대기관리구역 지정 설명회

영산강환경정,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 등

영산강유역환경정치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정하는 대기관리구역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영산강유역환경정치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정대강당에서 '대기관리구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구역법)' 내용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대기관리구역법은 내년 4월부터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정·시행되는 법안으로 전국 각지에 대기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에서 대기관리구역법의 내용과 함께 대기관리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갖는다.

수도·중부·동남·남부권 등 대기관리구역 포함 예정 지역을 설명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등도 안내한다.

현재 환경부는 남부권 대기관리구역에 광주와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화순을 포함할 지 검토 중이다. 대기관리구역법이 시행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광역 관리가 가능해 보다 체계적인 대기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연도·오염물질 별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 할당량 내로 오염원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건설 기계·선박·공항 등 핵심 배출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검찰, 화순군 압수수색

간부 공무원 뇌물 혐의 조사

검찰이 화순군 간부공무원 2명이 관공급사수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의 사무실 등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이 발주하는 관공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군산림조합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순군으로부터 115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공사 수수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18억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화순군산림조합 측에 몰아준 점과 2014년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최근 A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선정기자 wordflow@srb.co.kr



소녀상 앞에 모인 '광주나비'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나비' 회원들이 12일 낮 12시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23차 광주 수요행동을 열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또래 잔혹 폭행 사망' 10대들 구속

'구속 불가피' 판단, 실질심사 포기 경찰, 상습폭행 여부 수사 계획

죄의식 없이 수개월간 또래를 학대·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해 간첩체포된 10대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또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최모(19)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최 군 등은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진행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혐의를 시인한 이들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죄가 중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 군 등이 실질심사를 포기한 또 다른 배경에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도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최군의 원룸에서 30분 동안 A(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군에게 욕설을 강요한 뒤 번갈아가며 A군을 20~30차례씩 주먹과 발로 때리다 사망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직업학교에서 만난 A군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군의 방에서 휘어진 청소 도구나 우산·목발 등이 발견된데다 A군의 시신 여러 곳에서 멍 자국들이 발견된 점 등을 파악, 사망이 전에도 상습폭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선정기자 wordflow@srb.co.kr

"여순사건 '공소기각' 안된다"

대책임, 민간 희생 입증 자료 공개

여순사건 당시 사법작용을 가장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록들이 법원의 '여순사건재심'을 앞두고 잇따라 공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갖고 당시 재판이 존재했던 점을 알 수 있는 명령서와 이를 기사화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공개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기록을 발굴해 재판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판결서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이라는 식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병섭(항호사 연구가) 재심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주철희(여순항쟁 연구가)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9차례의 군법 회의와 이를 기록한 신문기록, 미국 국방부 문서, 사형인수를 기록한 미군 자료, 판결 명령서인 명령 3호와 명령 5호 존재, 외신기자의 보도사진과 사진 설명의 일치 여부, 외신기자의 회고록 등 기록들을 제시했다.

최경필 재심대책위 집행위원은 "제주 4·3재심처럼 여순사건 재심도 근거자료가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되지 않도록 70여년 전 군사재판 기록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며 정부 참고, 미군 자료, 언론보도 등 자료를 정부 참고 등지에서 찾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이 열린다. 재심대책위원회는 재판전 발굴하거나 수집한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천·김학진기자 lababoda2@srb.co.kr

檢 '정보 유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경찰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또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된 광주경찰청 B 팀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수사 과정상 변호사를 우선 영장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다"며 "변호사가 구속되면 경찰 직원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B 팀장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 변호사는 광주청 B 팀장에게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을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기자 wordflow@srb.co.kr

113초에 담은 학생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영화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11·3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의 사회적 공감 형성과 관심 확대를 위해 '11·3 학생독립운동은 []이다'라는 주제로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를 연다.

이번 영화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11월3일을 상징하는 113초 제한시간 안에 11·3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대외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중·고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일부터 8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한다.

접수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분야를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단계적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대상 1편(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 1편(국가보훈처장상,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편(교육감상, 문화상품권 20만원), 장려상 4편(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상, 문화상품권 1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누리집(student.gen.go.kr)을 참조하거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062-221-5532-33)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서기자 cms20@srb.co.kr

전남교육청 '편한 교복' 보급 앞장

편의성·활동성 높아 적극 권장 160여곳 착용...광주도 93개교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에 이어 학생들의 활동성을 크게 높인 '편한 교복'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160여개 학교에서 '편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편성, 중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편의성을 크게 높인 편한 교복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구나 입고 싶은 편한교복 채택'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인권친화적 교복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기존 교복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재질에서 벗어나 편의성·기능성·경제성을 고려한 활동성 높은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한 결과 160여개 중·고생들이 편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여학생들의 기존 교복은 신축성이 적은데다 일반 기성복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현대판 코르셋' 같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성을 높

이고 신축성·통기성·보온성이 담보된 편한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들이 늘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김성에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장은 "다가오는 여름, 흰색 셔츠나 블라우스, 재킷 등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편리와 기능성을 더한 생활교복 채택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복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각급 학교도 '편한 교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는 현재 93개(65%) 중·고등학교에서 편한한 생활교복을 도입했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